

우리의 현실 가능했던 '시장경제' 논쟁

쟁점으로 읽는 '97년의 지성사

경제학

김영용

전남대 교수·경제학

1997년의 한국경제는 한보, 진로, 그리고 기아그룹 등 대기업 집단의 부도사태로 특징지어지는 어두운 한해였다. 대기업 집단의 부도가 금융기관의 자산 부실화를 초래하여 금융위기를 낳았고, 급기야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거액의 외화를 차입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향후 상당한 기간의 조정과정이 필요할 것이며, 저성장과 고실업 등의 고통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이나 정부냐'

그러나 과거는 언제나 흘러가버린 것이다. 경제학적 용어로 그것은 매몰(埋沒)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경제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훈을 얻어내는 작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올해의 경제학계를 돌아보면 자유시장경제적 경제운용을 주장하는 자유기업센터 공병호 박사와 이에 반대하는 경상대학교 장상환 교수의 논쟁이 우선 눈길을 끈다.

우선 논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리라. 공병호 박사는 그의 저서 《시장경제와 그 적들》에서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한 경제운용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그쳐야 하며 민간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제운용의 틀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장상환 교수는 빈익빈 부익부, 독점의 심화, 공황, 실업 등은 모두 '밀립의 법칙'이 작용하는 시장의 실패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오늘의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차별에 의한 경제력집중, 중소기업경영의 악화, 지가 상승, 노동자 건강과, 농업의 피해, 지역간 불균형 심화, 불평등, 환경과, 그리고 권력남용 등은 모두 시장실패의 결과로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공박사의 주장은 이론의 타당성이 없는 절대 옹호론이라고 비판한다. 장교수의 주장은 정부가 민간경제에 자연스럽게 개입해야 할 정당성이 있다는 논리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공박사는 다시 장교수가 시장실패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현상도 시장경제를 통해 크게 완화 내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아마도 수렴할 수 없는 두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올해 크게 대두됐던 '시장이나 정부냐'의 논쟁은 한국경제의 당면현실로 옮겨볼 필요가 있다.

요약하자면 공박사와 장교수의 주장은 '시장이나 정부냐'로 압축된다. 일견 케케묵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한국의 경제학자들간에는 꼭 한번은 거쳐야 할 논쟁이다. 이는 경제운용의 기본틀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름할 만큼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한국사회에서 아직 한번도 공개적으로 대규모 논쟁이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시장이나 정부냐' 하는 경제사상 논쟁은 과거에도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비록 지식인들의 사상논쟁이 어느 일방이 타방을 설득하지 못하고 서로의 논리를 더욱 두터우고 예리하게 무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동시대에 공존하는 지식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실적 실증 가능한 연구성과 축적돼야

지식인들은 한 국가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실제로 미치고 있다. 그것이 사회적 안정을 피하고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보탬이 되는 지식이라면 더 없이 바람직하지만, 개인적 선호나 이념에 기초하여 현실을 잘못 판단한 지식이라면 그로 인해 한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막대하다. 그래서 지식인들의 지식체계는 개인적 삶의 차원을 넘어서 나라 전체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경쟁적인 여러 가지 이론이나 사상이 존재할 때 그들간의 우열을 가름해 줄 수 있

“ 지식인들의 지식체계는 개인적 삶의 차원을 넘어서 나라 전체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올해 경제학계의 '시장이나 정부냐'를 둘러싼 논쟁은 한국경제가 새 국면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새로 시작돼도 좋을 중요한 사안이었다. ”

는 것은 현실에 의한 실증이다. 물론 기술적인 방법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실증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이론과 실증에 관한 논쟁 가운데 더 진실이라는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 경제학계의 연구성과가 서로 지지하는 사상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을 만큼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논쟁은 흔히 목소리 높이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동부학과와 시카고학파는 30년이 넘는 기나긴 논쟁의 과정에서 경제사상의 전개는 물론 매우 넓은 영역에 걸친 인간의 행동을 밝히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두 사람의 논쟁을 현재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로 옮겨보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오늘의 경제난국은 시장

경제를 충실히 실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장의 실패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시장경제의 작동을 억압한 정부의 실패 때문인가. 오늘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일차적인 원인은 대기업 부도에서 연유한 실질충격(real shock)이 금융기관의 채권 부실화로 이어졌고, 금융시장이 이를 흡수해 주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대기업 부도는 어디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며 금융기관의 경쟁력 약화는 또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업종 전문화정책 등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인위적인 산업정책, 구두선에 그친 경제 규제 완화, 관치금융, 그리고 노동 시장의 경직성 등 시장의 작동을 억압한 데서 찾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더욱 더 강력한 정책을 펴지 못하고 시장에 내맡겨둠으로써 발생한 시장의 실패에서 찾을 것인가.

“시장이나 정부냐” 하는 논쟁을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작해도 좋을 듯 하다. 이제 한국경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마당이니 경제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논쟁을 바탕으로 마땅한 예측과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사상 출현을 위한 건전한 논쟁

공박사와 장교수의 논쟁 외에도 금년은 강원대학교 민경국 교수의 저작이 돋보이는 한 해이다. 특히 《시장경제의 법과 질서: 질서경제학과 주류경제학》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분석틀의 변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의 질서적 성격을 위해 어떠한 법질서가 필요한지를 보이고 있다. 이 주장은 결국 자유주의에 뿌리박은 것이기는 하지만 신고전파학적 시각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 또한 기대 불만하다.

마지막으로 사상논쟁에 있어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어느 한 편의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곧 그러한 사상을 견지하는 지식인들은 이 땅에서 모두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그릇된 지식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를 더 이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의 배태와 출현을 사전에 차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